

심층기획 건설산업, 적폐 청산 없인 미래도 없다

〈1〉가짜 판치는 건설시장〉2면

작통 자격증, 안전불감증, 담합, 갑질, 검은돈

건설에 퍼진 '5대 종양' 도려내자

작통, 불감증, 잠짜미, 갑질, 검은돈... 건설시장에 뿌리 깊이 박힌 적폐 중의 적폐들이다. 그동안 건설업은 '이게 건설업이냐'라는 탄식의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시장 곳곳에 파고든 건설업 등록증 자격증 불법 대여는 부실시공과 하자 불발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잇을 잇한 번씩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건설기업들이 손가락질받는 이유가 됐다.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담합은 국민의 혈세를 돌려가며 빼먹었다는 힐난의 대상이 됐고 발주기관과 건설사, 건설사와 건설사 간 불공정 관행은 건설업을 '갑질 공화국'으로 전락시켰다.

공사 수주를 위해 견내주고 견내받은 검은돈은 건설업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자

부실시공·안전사고·비리 얼룩 한국경제 이끈 주역 '명성 상제' 이미지·신뢰 회복 '절체절명' 업계도 위기인식 자정노력 강화

청하고 있는 건설업으로선 그야말로 치명적인 상처다.

이제 건설업 앞에는 이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수로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다행스러운 건 건설시장에서 이들 적폐를 인식하고,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뿌리 뽑아 수준 높은 품질의 시설품을 제공하고 건설현장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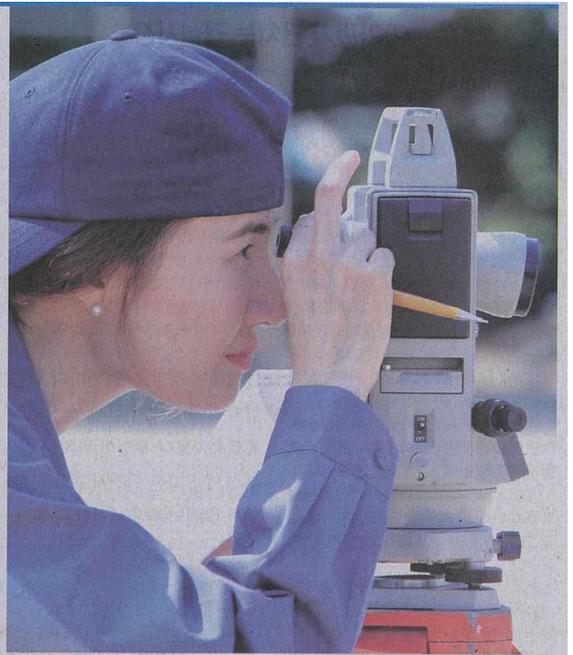
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전사고와 담합을 근절해 건설업이 한층 성숙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고 불공정 관행이나 비리와 건설업의 상관관계를 지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태세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자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는 추세다. 자신신고 이후 담합 조사 소식은 더욱 끊겼고 상생협력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건설시장의 비리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업의 적폐 청산이 하나둘씩 성과를 거두면 건설업은 '이게 건설업이냐'에서 '이게 건설업이다'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경남기자 knp@



금녀의 벽은 없다... 건설기능 최고수를 향한 도전

국내 건설기능 분야의 최고수를 가리는 제25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22일 충북 음성군 천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열렸다. 14개 직종 227명의 건설 기능인들이 참여해 그동안 자신이 연마해 온 기술을 뽐내며 기량을 겨뤘다. 음성-안운수기자 ays77@ > 관련기사 12면

'충남發' 감사원 실적용 '먼지떨기'... 지역건설업계 긴장

지역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충남지역 건설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등으로 대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아서다. 충남을 시작으로 감사원의 '실적내기용 감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청은 하도급계약 미통보, 허위통보, 하도급률(82%) 미달 등을 이유로 지역 건설사 14곳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감사원의 충남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들 회사에서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000만~2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추가로 1년간 신인도 감점(-1점)이 주어졌다.

제재 대상 업체들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14개사 중 2개사만 영업정지를 택했다. 일정기간 공공수주 활동이 전면금지되는 영업정지와 달리 과징금 처분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인도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실

제 수주에 제약이 생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에서 -1점은 공사의 당락을 좌우한다. 특히 30억~50억원 규모의 시설품공사에선 단독 수주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대형공사의 공동수급체 참여도 신인도 감점 탓에 쉽지 않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A사 관계자는 "0.01점 차이도 당락이 정해지는 입찰시장에서 1점은 상당한 페널티"라며 "탄기(설계·시공 일괄입찰)나 종합심사낙찰제에도 공동도급사로 참여해야 하는 데 지반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3년~2016년 6월까지 충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선 하도급 계약 체결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22개사(33건)가 적발됐다. 하도급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률(하도급 부분금액÷하도급 계약금액)이 82% 미만인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검토해 실제 하도급률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등 적발 14개사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신인도 감점 사실상 입찰봉쇄

비판 규정 인지 못한 실수까지 허위고의 통보로 간주해 논란 "꼬투리 잡기식" 타깃 확대 우려

이 82% 미만이면 적정성을 심사해 최종 심사점수가 90점에 못 미치면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통해 계약내용이나 하수급인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하도급 계약내용 허위통보와 하도급률 미달이다. 제재를 받은 B사는 "◇◇항 시설보강공사"에

서 어선인양기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재료비와 경비 등 순공사원가를 축소하고 기타 경비를 누락시켜 하도급률을 실제(64.52%)보다 높은 88.62%로 부풀려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계속비공사의 경우 애초 하도급률을 계산할 때 4대 보합 등이 포함 안 됐지만 중간에 비싼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며 "고의로 허위통보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제재 대상 업체들은 모두 공사가 수년 전에 끝난 준공현장에서 문제가 됐다. 반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하도급변경계약을 맺는 것으로 처벌을 면제됐다. 제재 대상 C사 관계자는 "하도급사와의 분쟁도 없이 공사를 잘 끝낸 현장에서 갑자기 하도급률을 재계산해서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며 "엄밀히 따지면 하도급 계약내용을 바뀐 규정대로 검토하지 않은 감리·발주자 등 감독책임이 더 크다"고 주

장했다.

제재 대상 건설사들은 충남도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낸 상태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는 "대부분 건설현장이 하도급률을 82%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만일 작은 기준 하나라도 잘못 적용하면 다 걸릴 수 있다"며 "허위·고의의 정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부담이득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감사원이 작정하고 실적내기용 감사로 문제를 삼고 있다"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타지역으로 감사가 확산될 가능성, 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하도급계약 허위통보를 적발한 감사원 대전본원은 충남도청 외에도 충남 개발공사,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진행했다. 세종·충북 지역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현장 불법 40%가 ‘짜퉁’ 등록·자격증... 진품이 수난

〈1〉가짜가 판치는 건설시장

#1. 지난 2014년 무려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A건설은 건설업 등록 때 12명의 기술자가 필요했지만 절반이 넘는 7명의 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을 마쳤다.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건립공사를 낙찰받은 후엔 공사금액의 5%를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줬다. 결국 무자격 업체가 체육관을 짓게 됐고 체육관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2. 지난해 경찰청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일선 경찰서에 ‘부정부패 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 결과, 무려 6633명을 검거했다. 저가저질의 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보조금 횡령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자격증 불법 대여가 2593명(39.1%)으로 전체 불법행위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10건 중 4건이 자격증 불법 대여로 드러난 것이다.

건설업 등록증과 자격증은 건설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본 승차권이다. 정당한 승차권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영세한 사업자 입장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다보니 건설업 등록증과 자격증의 불법 대여 유희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유희의 손길이 다가오면 뿌리치기 어렵다.

건설시장에 이른바 ‘짜퉁’ 건설사가 판을 치고 이들이 운영하는 현장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과연 건설사가 저지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에 쏟아지는 비판과 비난은 정당한 승차권과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건설사들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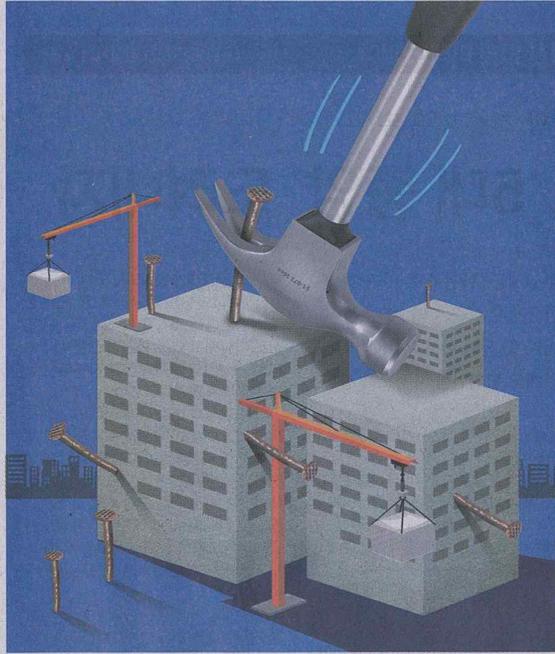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까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적발 건수는 26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22건이 적발된 이후 2015년 29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작년에는 무려 42건으로 50% 가까이 급증하고선 올해도

불법대여 적발 건수 해마다 급증 압암리에 행해져 실제 ‘상상이상’ 유료승차보다 무임이 판치는 꼴 부실시공 따른 안전사고로 직결 연간 수천억원대 세액탈루 추산

가짜로 상송 폭선을 그리고 있다. 문제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가 압암리에 행해져 실제 ‘상상이상’ 유료승차보다 무임이 판치는 꼴 부실시공 따른 안전사고로 직결 연간 수천억원대 세액탈루 추산

가짜로 상송 폭선을 그리고 있다. 문제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가 압암리에 행해져 실제 ‘상상이상’ 유료승차보다 무임이 판치는 꼴 부실시공 따른 안전사고로 직결 연간 수천억원대 세액탈루 추산



실제 시공은 무등록 업체가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브로커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부실한 건설업체를 인수하거나 발주자, 무등록 업체, 설계자 간 공모를 통한 불법 대여 방식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가 건설시장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는 것은 브로커와 무등록 업체들이 단순히 빚을 위안했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책임시공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기술자를 배제하지 않고 공사 감리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게 불보듯 뻔한 만

람 시공 품질 저하와 하자 발생은 필연적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원룸,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언제, 어디서 제2의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는 한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등록증 대여로 인해 불법 대여 업체들은 단기간에 실적 확보가 가능하고 공공공사 입찰에서 정상적인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반면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기술자 보유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는 불법 업체에 밀려 버려 끝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남쳐나는 짜퉁 건설사 탓에 성실한 ‘진품’ 건설사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연간 2조~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무등록 업체들의 매출 누락과 900억~1350억원 수준의 법인세·주민세·산재고용보험료 세액 탈루,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부가세 탈세 등도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등록증 불법 대여로 인해 시설품의 수요자와 이용자인 발주자와 국민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건설한 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건설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끊이지 않는 자격증 불법 대여 왜?

처벌 수위보다 ‘경제적 이득’ 워낙 커... ‘막가과식’ 활개

건설시장에서 건설업 등록증·자격증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블랙마켓(Black Market)’은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건설 시장 곳곳을 파고들어 건설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건설업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등록증·자격증 불법 대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외 반이 적발되더라도, 받게 되는 처벌보다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해하는 경제적인 비용은 벌금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등록증 대여는 대여 건수에 따라

상상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다.

예를 들면 1건당 10억원의 공사에 연간 100건 이상 불법 대여하면 매출액만 1000억원에 달하고 공사비의 3%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해도 30억원을 주머니에 챙길 수 있다.

처벌 리스크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워낙 큰 탓에 등록증 불법 대여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로 적발된 사건을 토대로 수수료 규모를 파악해보면 최소 10억원에서 35억원 수준에 이른다. 사실상 등록증 불법 대여 행위가 모두 적발되지 않으면 대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다.

등록증을 빌리는 무등록 업체는 등록증 보유를 위한 비용 부담과 시공에 따른 의무 책임에서 자유롭다.

이렇다 보니 무등록 업체가 시공한 현장에선 하자 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고 하자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등록증 불법 대여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건축주 입장에서도 등록증 불법 대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정상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가 가능하다.

심지어 불법 대여 업체에 공사를 준 사실이 적발된다고 해도 처벌 규정이 미미해 겁을 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박경남기자

‘불법 차단’ 실효성 높일 해법은

벌금·형사처벌 규정 강화... 리니언시 제도 고려해볼만

건설업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증·자격증 불법 대여를 뿌리뽑기 위해선 강력한 제재와 적절한 단근이 필요하다.

우선 강력한 제재로서는 처벌의 대상과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거론된다.

건설업 등록증·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와 알선자는 물론 건축주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벌금과 형사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술방망이’ 처벌 규정으로 건설업 등록증·자격증의 불법 대여를 사실상 방지

해온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 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최소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둔 대부업법 이상의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축주에 대한 처벌도 시공품질과 안전사고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상적인 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게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증·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다가 적발된 경우 건설업 재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거나 재등록 가능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해 자동 정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등록증·자격증 불법 대여에 따른 처벌보다 경제적 이득이 큰 만큼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 등록증·자격증 불법 대여로는 절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단근의 경우 등록증·자격증 불법 대여에 참여한 관계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가 협조하는 경우 제재를 감경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박경남기자

불법 대여 업체 걸러내려면...

기술자 중복·착공 신고 많으면 ‘요주의’ 발주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도 시급

건설업 등록증·자격증 불법 대여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금세 감세를 알아차릴 수 있다.

현장 배치 기술자 중복되는 업체, 기술자 보유 인원 대비 상대적으로 착공 신고 건수가 많은 업체, 연간 착공 신고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업체 등이 건설업 등록증·자격증 불법 대여의 대표적인 징후다.

이 같은 징후를 걸러낼 수 있는 그물망만 촘촘하게 설치해도 등록증·자격증 불법 대여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우선 등록증·자격증 불법 대여 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세무당국, 사업당국, 사업자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착공 신고 단계에서 건설사와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현장 배치 기술자와 건설사 간 고용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장 배치 기술자에 대한 확인·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사로 개설가능한 현장은 한정적인 만큼 착공 현황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해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면 불법 업체를 잡아낼 수 있다.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국토부는 전국 건축물의 착공 신고 현황을 토대로 동일인 시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는 사업자 단체에 제공한다.

합의 사실이 확인되면 건설업 등록제, 수사기관 고발, 세무기관 통보, 국토부 결과 전달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기술자 이외에 매출액, 업력, 지역, 대표자 등을 추가하면 더욱 촘촘한 퇴출 그물망이 된다.

매출액과 업력에 비해 착공 신고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업체, 특정 지역에 착공이 집중된 업체, 대표자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업체 등은 등록증·자격증 불법 대여를 의심해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박경남기자

고용계약서 확인·검증 절차 강화
특정지 집중·대표자 잦은 변경 등
업체 활동현황 세심히 관찰해야

“男보다 못할쏘냐” 여성 3배 늘어... 51년 나이차 불꽃경쟁

(지난해 대회 참가자 대비)

(최고령-최연소)

전국 130만 건설기능인 가운데 최고수를 뽑는 '제 25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22일 충북 음성군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열렸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능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기진작을 위해 1992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과거 어깨너머로 배우던 시공 기능을 산업 차원에서 발굴하고 국가가 직접 공인해주는 기회의 장이다.

올해 대회에선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등 14개 직종에서 선발된 227명의 건설 기능인들이 기량을 겨뤘다.

경연장은 그동안 같고 뒤은 땀방울의 결실을 보려는 숙련공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정성껏 쌓아 올리는 한장 한장의 벽돌과 전기용접실의 강렬한 불꽃에서 오랫동안 건설현장을 지켜온 이들의 땀과 눈물, 자부심이 느껴졌다.

참가자들도 한층 다양해졌다. 지난해 대회(11명)보다 여성 참가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난 30명이었다.

14개 직종, 227명 최고수 열전

땀방울마다 건설인 자부심 물씬

인력 고령화 반영하듯 60대 많아

다음달 16일 건설회관에서 시상식

타일 등 12개 자격증을 가진 박병식(54)씨였다. 직종별로는 전기용접 참가자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참가자 연령대도 10대에서 70대까지 폭이 컸다. 40대가 66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인력의 고령화를 반영하듯 60세 이상 참가자도 22명이나 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 가운데 20~30대는 24.2% 수준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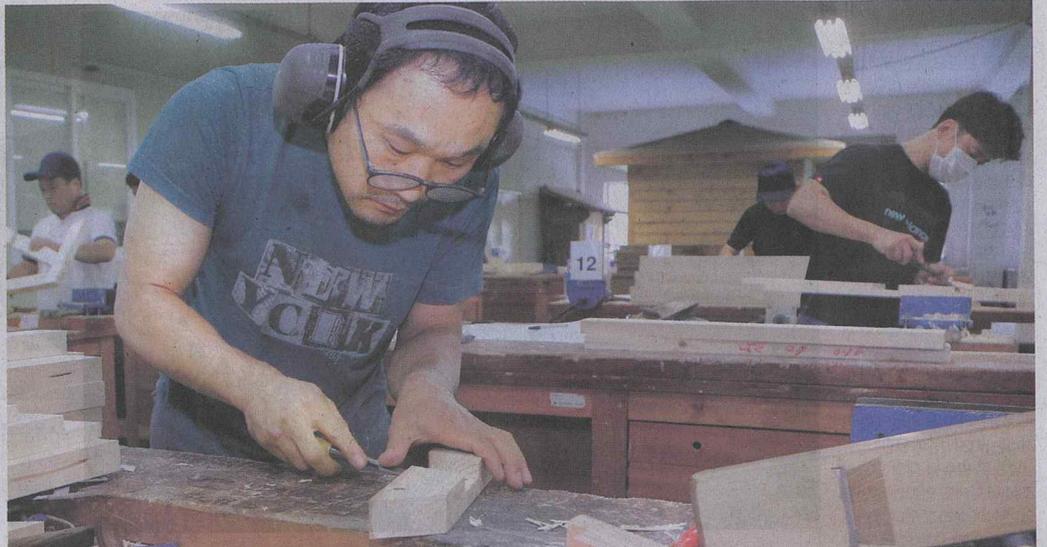
최고령자와 최연소자의 나이 차는 51년이었다. 최고령 참가자로 타일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김영현(70)씨는 “손은 여전히 빠르는데, 눈이 점점해서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을 따라잡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나를 불러주는 한 오래도록 건설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유일한 10대로 측량 분야에 참가한 연대흠(19)씨는 “회사 권유로 선배와 함께 참가했다”며 “자신감은 넘치는데 막상 선배들 측량하는 모습을 보니 한참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10년 더 열심히 배워서 다시 한번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해당 직종의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연수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다음달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다.

건단련은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김태희기자kth@



지난 22일 충북 음성군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열린 '제25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건축목공분야에 참가한 선수가 헤드폰을 쓰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건축목공을 비롯해 미장·조적·철근·타일·배관·전기용접 등 14개 직종에 참가한 227명의 건설 기능인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음성-안윤수기자 ays77@

